

“우리 웃으면서 일합시다”

교육의향



노영필
교육평론가

인수과정도 없이 곧바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좀 어색하죠?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나랏일을 위해 아군과 적군을 나누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자고, 승자갑질이나 철제철명의 국정을 두고 즐겁게 진실로 머리 맞대자고 한 말이다.

직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 안에는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희망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다고 명비어천가를 읊조리자는 말은 아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첫째, 그는 전통적인 학벌 중심 사회에서 벗어난 인물이다. 중·고졸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점은 학벌주의에 기대지 않고 성장한 경로를 보여 준다. 계파나 세력의 신의와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이재명식의 새로운 능력주의의 출현이다.

둘째, 인구 90만 조금 넘는 성남시의 소규모 지방정부를 시작으로 가장 큰 경기도를 이끌며 실무 행정을 경험했다. 사회적 약자의 현실과 지역 행정의 어려움을 체감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거시 권력 중심 정치인들과 구별된다.

셋째, 중앙 정치 세력과의 이해관계가 약하고 기득권 세력과 정경유착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그래서일까, 그는 직접 갈등 현장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한다. 오히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받아쳐 사법적 의혹과 논란에 맞섰다. 많은 국민은 오히려 그 공격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시기와 모험이라고 본다.

넷째, 역대 최고 수준의 유권자 참여 속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은,

단순한 정파의 승리가 아닌 분열된 사회의 새로운 통합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기대를 낳게 한다.

다섯째, 친위내란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던 시기,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광장 민주주의에 참여해 정권 교체를 이룬 과정에서 시대정신을 꺼내고 탄생한 대통령이라는 점도 상징적이다.

여섯째, 배움을 위한 최고로 좋은 교과서의 등장이다. 일을 잘하는 기준이 뭔지, 충직한 공복이 뭔지, 권력과 권한이 뭔지를 행동으로 보여 준다. 국무회의에서 “일을 제대로 합시다.” “일을 잘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 주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놀라운 면이 한두 가지 아니다. 고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겪은 고난은 지금도 우리 정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당시 ‘검사와의 대화’는 권력기관의 폐쇄성과 개혁 의지 사이의 충돌을 보여줬다. “그러면 막가자는 것이죠?”라는 말은 법치의 허울 뒤에 감춰진 불균형을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권력이 아니라 권한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그 역시 다양한 방식의 정치적 공격에 노출되어 왔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반면 실용적 복지와 공공재정 개혁을 추진한 사례로도 평가된다. 문제는 비판이 때로 근거 없는 낙인찍기와 왜곡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특히 사법기관을 통한 정치적 견제는 그 정당성조차 논란이 되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사회 전환의 갈림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분열과 갈등이 여전한 현실을 드러냈다. 49%의 유권자가 이재명을 선택했지만, 41%는 정반대 진영에 표를 던졌다. 이는 건강한 대립일 수도 있으나, 여전히 반칙과 특권, 지역·계층 불균형 속에서 미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회의 단면이기도 하다.

희망찬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

쉬움도 염려도 있다.

첫째, 가장 아쉬운 분야는 교육이다. 교육은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지금 교육은 교육의 사회화 기능 자체가 위태롭다. 학생들의 위기와 교사의 탈진은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 결과다. 비판적 사고보다 순응과 성적 경쟁만이 강화되어 진실과 거짓을 가릴 힘마저 약화되고 있다. 교육문제가 그의 의제 안에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 염려된다.

둘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권위주의 시대의 연장선에서 ‘반국가세력’으로 문갑된 국가폭력을 바로잡고, 진실과 화해의 장을 마련하기 바란다. 물론 한 손으로 박수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적 정의’와 ‘포용적 통합’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 선언 앞에 놓여야 할 대전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험난한 과정을 마주하고 있다. IMF보다 나빠진 경제, 꼬인 외교, 분열된 사회, 내란 세력 청산 등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생존과 위기 관리만으로도 정부 역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구조 개혁과 민주주의의 심화는 뒷전으로 밀리게 될까봐 한편에 노파심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약자를 향한 시선, 공동체를 향한 언어, 그리고 경쟁과 설득을 통해 실제로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의 탄지결기, 사법권력과 언론의 횡포가 카르텔화된 사회적 상수로 군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극단을 넘어서고, 합리적인 대화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편법과 담합, 반칙과 퇴행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두고 국민을 크게 섬길 때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이며, 민주주의가 다시 뿌리내릴 출발점이다. 그래야 모두가 웃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기대되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정부지원 ‘획기적 지원’ 필요해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조하면서 전남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남은 전국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20% 이상이 집중돼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적지로 꼽히는 바다를 품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전환 가속화와 함께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 비중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오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농가 태양광 설치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서남해안과 소멸 위기 농어촌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등을 키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광주·전남에 대해서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 중단을 풀고 RE100 산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탄소중립은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상고온, 집중호우,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일상인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은 전 지구적 과제다. 특히 전남은 해남·영광·고흥을 중심으로 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구축돼 있으며 이는 전국의 22.2%에 달한다. 육·해상풍력 또한 전국의 20% 수준으로 현재 신안·완도·여수 등에서 0.45GW급 설비가 운영 중이다. 전남이 가진 해상풍력 잠재량도 125GW로 전국 1위다.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고, 수심이 5~20m로 낮은데다 사회간접자본 등 개발 여건이 우수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인류의 삶을 뒤흔드는 재난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바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나서야 한다. 전국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인·허가 문제, 영농형 태양광 등 정부지원의 획기적 지원도 필요하다. ‘RE100’은 이 대통령의 약속이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다.

‘시민의 발’ 불모 시내버스 파업 중단해야

시민불편 지렛대 더 이상 안돼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5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가 현충일 연휴 동안 시민 불편을 고려해 준법 투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다시 9일부터 파업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임금 8.2%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는 노조와,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고수하는 사측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는 민간영역에 있는 동시에 시민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다. 파업이라는 수단이 시민의 이동권을 불모로 삼는 방식이라면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시내버스는 많은 시민들에게 ‘이동의 마지막 수단’이다. 특히 자가용이 없는 노년층,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에게는 대체 수단이 사실상 없다. 실제로 지난 5일 전면 운행 중단 당시 정류장에선 발을 동동 구르던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하철과 택시로 쏠린 수요는 과밀과 혼잡을 불렀고, 출근길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연휴라 불편이 덜하다’는 노조 측 설명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에 가깝다. 물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정당하다. 과도한 업무, 고령화된 노동 환경, 낮은 임금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특히 정년 연장 문제는 단순한 노사 협상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 노동 구조 개혁의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시민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닌, 성숙한 협상 전략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사측과 광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파행과 파업은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해 온 결과다.

광주시는 단순한 중재자 역할을 넘어서, 공공교통의 책임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준공영제의 운영 실패를 점검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송체계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 시민 불편을 지렛대 삼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노조는 예고된 재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장으로 복귀하고, 사측과 광주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협상을 통해 ‘시민의 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공공성과 생계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길이다.

서석대



삼국지 ‘순욱전(荀彧傳)’에 이런 고사가 있다. 동한 말기 당시만 해도 조조의 실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몇 차례 전투에서 승리한 후, 특히 산동성 연주 일대에서 여포를 격파한 후 그의 세력은 상당히 커졌다.

연주 근처의 서주는 그 지세가 험한 요충지인 데다가 각종 산물이 풍부해서 조조는 진작부터 이 지방을 손에 넣고 싶어 했다. 그러나 서주를 지키는 도겸이라는 인물이 워낙 인심을 얻고 있는지라 한 차례 전투를 벌여보았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 뒤 도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조조는 곧 서주를 공격하려고 했다. 이때 조조의 모사 순욱이 반대하고 나섰다.

“연주 땅은 우리가 아직 기반을 잡지 못한 곳인 데다가 여포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동원하여 서주를 공격하면 내부가 텅 비게 되고, 그때 여포의 공격을 받으면 큰일입니다. 서주 공략이 만에 하나 실패로 돌아가는 날에는 우리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순욱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지금 도겸이 죽었다고는 하나, 우리가 이미 그쪽과 한번 겨뤘기 때문에 그쪽 부장들은 우리에게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습격에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견벽청야(堅壁淸野)’의 전법으로 우리를 상대할 것입니다. 만약 공격하여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논밭의 식량도 거

두지 못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조조는 순욱의 분석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 서주 공격을 유보했다. 이후 군량미를 충분히 확보하고 서주를 공격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다.

‘견벽청야’는 철저한 전쟁 대응 사자성어다. 청야의 한자는 맑을 청(淸)과 들(野)로서 깨끗이 싹 비워버린 들판을 의미한다. 일종의 초토화 전술로도 볼 수 있다. 이 전술은 적에게 자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적의 전진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하며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두렵다. 아무도 없다. 필기 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파견근무하던 공무원들을 모두 원대복귀 시키고 최소한의 사무용품도 싹 치워버려 새 정부 첫날부터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 정부의 견벽청야 작전이 펼쳐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장면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준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나라를 영망진장으로 만들 작정이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 정부와 국민들의 힘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